

광주·전남 기관 본격 국감 시작

이번주 영산강환경청, 광주고법·고검, 시·도교육청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기초연금·4대江 대충돌 예고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20일부터 중반전에 들어갔다.

여야는 중반전에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권 장악을 위한 공세수위가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광주·전남지역 기관에 대한 국감이 본격화된다.

우선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22일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현장시찰, 23일 광주 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광주 고검·광주지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또 24일엔 광주지방국세청, 25일엔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

감이 실시된다.

국감 초반 예초 여야가 다짐했던 정책·민생국감이라기보다는 정쟁국감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야당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기초연금 후퇴, 유영이 국사편찬위원장 자격 논란 등으로 정부·청와대를 맹공하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국감 초반 광점으로 부상시킨 것을 상당히 호평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악재에 곤혹스러워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차단에 나섰다.

앞으로도 곳곳에 압초가 널려 있다. 대선개입 의혹·4대강·기초연금 등 예민한 광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제 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댓글 작업

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17일부터 업무에

서 전격 배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띤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최대 광점을 부상한 상태다. 정부의 동양그룹 사태는 핵심 민생 국감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의 지역환경청, 24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각각 국감을 벌이는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추진됐다는 의혹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와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위에서는 케이블시험조작 사건으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준공 기연이 현실화되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부자감세 논란, 세수부족 실태와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과도한 세무조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불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여야가 일전을 겨루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감 브리핑

“코트라 해외전시회 20% 수출 성과 전무” 김동철 의원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08년부터 중소 수출업체들과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 해외전시회 가운데 20%가 수출액이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리에 따르면 코트라는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 수출업체들과 참가한 해외전시회 617개 가운데 112개(18%)는 수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17개 전시회 중 21개(18%) ▲2009년 139개 중 31개(22%) ▲2010년 90개 중 15개(17%) ▲2011년 95개 중 12개(13%) ▲2012년 101개 중 17개(17%)가 수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해도 8월 현재 115개 해외전시회에 참가했지만 16개(21%)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당 기간 참가업체 수는 총 1만 1979개였고, 국고지원액도 781억 원에 달했다.



“영세 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호남은 ‘쥐꼬리’” 이용섭 의원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바꿔드림론)의 1년 실적이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지원되는 액수는 각각 2%, 2%,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

해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8월 현재 지원실적은 1140억원에 불과했다. 이미지도 광주지역에는 전체 금액 1140억원의 2.2%인 26억원(277건)에 불과했으며, 전남지역은 전체 금액의 0.8%인 10억원(122건)에 그쳐 제도가 걸들고 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하자 한국은행은 1년 만에 5000억원을 지원한 후 5000억원으로 낮췄다. 이 의원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배 급증” 임내현 의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년 만에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발생 액수는 모두 4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26억원 ▲



행은 1년 만에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 1조 5000억 원을

낮췄다. 이 의원은 “이용 실

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

니라 시중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

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푸른길 공원 일대 ‘작은 공연장’ 조성

박주선 의원, 특별교부세 7억 확보 밝혀

철도 폐선부지를 재활용한 푸른길 공원 일대에 작은 공연장이 들어선다.

박주선(무·광주 동구) 국회의원은 푸른길공원 일대에 작은 공연장 조성을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푸른길 공원은 광주시민들의 산책로와 문화공연장으로 주민 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했지만, 문화공간 등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푸른길 공원이 부족한 지방재정 혼란 때문에 변변한 편의시설

도 못 갖추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작은 공연장 조성을 통해 푸른길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측은 이번 작은 공연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노후청사 개선사업비 등을 10월 현재까지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의원 안철수 ‘있나 없나’

재보선·국감 정국 정책대안 제시 등 존재감 못 드러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30 재·보선 및 국감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30 재·보선이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 남·울릉 등 전국 2곳에서 축소돼 치러지게 되면서 열기가 예년 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안 의원은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아 여야의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제외돼 있다.

국감 국면에서도 보건복지부 소속인 안 의원은 무소속의 한계에 여야가 기초연금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때에도 ‘정책 대안 제시’를 내세워 공방과는 거리를 두면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 아

래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역 조직화를 하는 등 꾸준히 세력화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지역 토론회 재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세력화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의 심장 창당 시점은 여전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지방선거 전에 후보 공천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역산하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창당 작업이 예상된다.

이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 확두는 우생마사(牛生馬死·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며 세력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생마사’는 흥수나 소와 말이 물에 빠지면 말은 물살을 거스르며 절실히 헤엄치다가 결국 죽게 되고 소는 물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야, 이석기 의원에 세비 지급 중단 추진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수당이 되거나 기관에 대한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수당이 되거나 기관에 대한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 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403	1	광진구 강진읍 낭포리 39-7 3020㎡	답	45,300,000	수목제외·농지취득증명요
2013타경 588	2	광진구 마량면 영동리 561 5038㎡	전	18,136,8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915]					
1	1	광진구 작현면 내기리 142-10 1310㎡	답	11,13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2	동소 142-13 1800㎡	답	32,249,000	일괄매각·농지취득증명요
3	3	동소 142-14 1994㎡	답	32,249,000	독자격증명요
4	4	동소 265-2 145㎡	대	3,729,100	일괄매각
	5	동소 265-1 411㎡	대	15,094,800	매각제한
	6	동소 267-1 351㎡	대	15,094,800	제시외건물소재
	7	동소 267-2 1035㎡	대	34,211,600	일괄매각·농지취득증명요
[2013타경 1369]					
1	1	광진구 성전면 명산리 산131 4410㎡ [현황: 답]	임야	34,211,600	일괄매각·농지취득증명요
2	2	동소 산136-5 1108㎡ [현황: 답]	임야	34,211,600	독자격증명요
[2013타경 1420]					